

노동 문제 한 곳서 챙긴다...광주 노동권익센터 기대감

시, 노동센터·정규직센터·청소년노동인권센터 통합 내년부터 운영 혹서기 안전쉼터·산업위험 신고센터 신설...청소년 등 소외 우려도

광주시가 연말께 노동관련 센터 3곳(광주노동센터,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을 '노동권익센터'로 통합한다.

노동계에서는 노동현안을 총괄해 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면서도 청소년 등 일부 노동자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광주시는 오는 12월 31일 광주노동 3개 센터(광주노동센터,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운영을 종료하고 노동권익센터로 통합한다고 23일 밝혔다.

2022년 10월 행정감사에서 노동 3개센터의 기능

이 중복되는 지적이 나오에 따라 노동 3개센터 개선방안 마련 TF팀을 꾸리고 관련 사안을 논의해 온 결과다.

광주노동센터(서구 차평동)는 2013년 12월 24일부터,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광산구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는 2013년 9월 9일부터, 청소년노동인권센터(동구 보성빌딩)는 2016년 4월 11일부터 운영돼왔다.

광주노동센터(민주노총 광주본부 위탁)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고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광주비정규직센터 위탁)는 아파트 관리노동자

지원, 택배·가사·청년프리랜서 지원을 하고 있다. 청소년노동인권센터(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위탁)는 알바전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캠페인을 진행해왔다.

광주시는 2025년 1월부터 시 소유인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건물(광산구 하남근로자복지관)을 광주노동권익센터로 통합해 운영할 방침이다.

기존 3개 센터의 직원 13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중복된 사업을 통일하고, 확보된 인력과 예산으로 광주지역 노동자들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사업으로 혹서·혹한기 플랫폼 이동노동자 안전쉼터를 본격 운영한다. 그간 공공기관 건물 등을 이용해 운영해 왔지만 미흡하다는 지적(2023년 6월 15일 광주일보 6면)을 수용해 쿠폰과 휴식 공간을 마련하는 등 확대한다는 것이다.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때에도 지자체에 조사·조치 권한이 없어 개선대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이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산업위험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신고를 접수한 유관기관은 위험성 평가와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조직화에도 힘쓴다.

센터 개소를 두고 일각에서는 노동문제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긍정론이 나온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전남노동권익센터도 비정규직지원센터로 시작했지만 노동권익센터로 출범한 이후 더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었다"며 "현재 광주 노동현안은 노동, 청소년, 비정규직 등 3개 분야로 분산돼 있어 한 목소리를 내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과 같은 일부 소외계층의 입장을 대변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노동계에서는 "성인 노동은 이슈가 많아 노동권익센터에서 다루게 될 안전이 많겠지만 청소년 노동은 목소리도 작고 힘도 약해 대변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동권익센터가 차가 없는 학생들이 이용하기 힘든 하남산단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광주시 담당자는 "접근성에 대한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청소년노동센터의 상담이 주로 외부 출장 방식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에 운영비 감축 측면에서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며 "확보한 인력과 예산으로 소외되는 계층 없이 노동자 권리보호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문화전당 가을 성금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인 23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인근 나무들이 울긋불긋 물들어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교육 현장 성비위 '다발'...처벌은 '솜방망이'

5년간 광주·전남 교원 등 성비위 징계 57건...중징계 20건 그쳐

광주·전남에서 최근 5년간 교원과 교육직공무원의 성비위 징계가 5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퇴출하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는 20건에 그쳤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경기 시흥 갑)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광주에서 교원의 성비위 징계건수가 총 1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5건, 2020년 7건, 2021년 0건, 2022년 3건, 2023년 2건, 2024년 8월까지 2건 등이었다.

전남에서는 2019년 7건, 2020년 4건, 2021년 3건, 2022년 3건, 2023년 3건, 2024년 8월까지 5건 등 총 25건의 교원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다.

교육직 지방공무원이 성비위를 일으킨 사례는

광주에서는 총 5건으로, 2019년 1건, 2022년 1건, 2023년 2건, 2024년 8월까지 1건 등이었다. 전남에서는 2020년 2건, 2021년 1건, 2022년 2건, 2023년 2건, 2024년 8월까지 1건 등 총 8건이 발생했다.

광주에서 발생한 교원·교육직공무원 성비위에 대한 징계는 견책 6건, 정직 9건, 강등 3건, 해임 5건, 파면 1건 등이었다. 전남은 견책 5건, 감봉 8건, 정직 5건, 강등 1건, 해임 11건, 파면 3건 등이었다.

문정복 의원은 "교육계 공무원들의 성비위 사건이 다발했음에도, 교육계에서 디페이크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을 담당한다는 건 역설"이라며 "최근 디페이크 사건 이후, 성폭력·성희롱 등 성비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만큼 공직사회 성비위에 대한 징계가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일 강제징용' 양금덕 할머니 '제3자 변제' 수용?

시민모임 '치매 투병 중'...정부안 수용 거부 피해당사자는 이춘식씨 뿐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양금덕(96) 할머니 측에 일명 '제3자 변제금'을 지급했다.

23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이날 재단은 양 할머니측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함에 따라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 변제금 수령 절차는 양 할머니의 가족이 밟았다. 양 할머니는 일제강제동원과 관련 수십년 동안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투쟁해온 대표적인 피해자다.

양 할머니는 1944년(초등 6년) 일본 나고야 미

쓰비시중공업 항공기 제작소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강제노역했다. 그는 일본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사과·한마디, 배상 한 푼 받지 못하자 일본과 한국 재판부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8년 양 할머니 등의 위자료 지급소송을 인용해 전범기업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가해자인 일본정부와 기업을 배고 재단을 꾸려 돈을 마련해 배상하겠다는 제3자 보상을 내놓자 수용을 거부하며 반발했다.

양 할머니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가해자인 전

범기업이 주는 돈이 아닌 피해국 스스로 마련한 동냥같은 돈은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날 입장문에서 "피해자와 가족의 결정에 대해 평가를 내리기는 힘들다"면서도 "양 할머니가 지난해 11월부터 투병 중이며 치매를 앓고 있는 만큼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변제안 수용이 할머니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어떤 경위로 결정이 이뤄진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 할머니 측이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함에 따라 수용 거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피해 당사자는 이춘식(104) 할아버지 1명 뿐이다. 소송 당사자와 유족 등 총 15명 가운데 13명은 변제금을 수령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쓰레기 안치워서" 어린이공원 방화 40대 입건

북구시설공단, 미화원 안전 위한 발판제거에 수거 지연 안내

'집 앞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았다'며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북부경찰은 어린이공원 쓰레기더미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 A씨를 일반물건 방화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10분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운암어린이공원에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있다. 불은 출동한 소방에 의해 곧바로 진화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술에 취해 범죄했고 불을 지른 뒤 경찰

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쓰레기 더미는 A씨집과 인접해 있으며 해당 쓰레기를 수거해달라는 민원이 구청에 제기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동기를 조사 중이다.

한편 최근 광주북구시설관리공단은 환경미화원 안전을 위해 쓰레기수거차량 발판을 제거(9월 5일자 광주일보 6면)해 작업량 감소로 쓰레기 수거가 지연될 수 있다는 안내를 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